

# 2021년 9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해당사항 없음'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4:00~04:30 (재방송 매주 월 00:25~00:55)

○ 방송현황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김창숙	9/5	[뉴스특보] 오늘 국회 본회의...여야 언론중재법 평행선 [뉴스특보] 오늘 국회 본회의...여야 언론중재법 평행선	
김홍태	9/12	[뉴스특보] 또 전자발찌 착용자 범죄...남의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 [뉴스특보] 고승범 e"가계부채대책 준비...만기 연장 추석 전 결정"	
안호림	9/19	[뉴스특보] 청부고발' 의혹 여의도 강타...尹 "음해" 與 "쿠데타" [뉴스특보] 첫발 댄 워드 코로나...인센티브 적용에 추석방역 기로 [뉴스특보] BTS '버터', 빌보드 정상 탈환...10번째 1위	
김창숙	9/26	[뉴스특보] "비리 백화점" vs "국민의힘 게이트"...'대장동' 공방 격화 [뉴스특보] 기술 발전에 신·구산업 갈등...관건은 생태계 훼손 여부 [뉴스특보] 건보료 부담커지는데...年 수백·수천번 진료받은 환자 '수두룩'	

##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이재원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교수	2016. 08. 23	-
활동	김창숙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2018. 12. 27	-
활동	안호림	인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2021. 01. 26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 2021년 9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1 9/5(일)	김창숙	<p>지난 8월 30일 오전 10시 &lt;뉴스특보&gt;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앵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8월 30일 오후에 예정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여야간의 합의가 가능할 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야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하게 가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개정안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재차 논의를 시작하자거나 폐기하자는 것이 아당 측의 안일텐데 합의를 위한 간극이 너무 커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덧붙여 여당 입장에서는 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인데, 현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면 여론의 못매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이 상정될지 여부에 대해 추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부위원장은 청와대 입장이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30일에는 여당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8월 30일 &lt;뉴스특보&gt;를 보면서, 국민들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눈에 띄었는데요. 정책 결정에 여론은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개정안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고발, 비판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언론 스스로 자성할</p>	<p>언론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항상 자성하고 더 나은 정보제공과 사회비판을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p>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기회로 언론은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언론의 가치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언론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 9/12(일)	김홍태	<p>지난 3일 오후 5시 뉴스특보에서는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 시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교사 특별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으며,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당해 보도에서는 공수처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같은 결론으로, 공수처가 검찰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 요구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는 공심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공수처의 기소 요구 결정에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기관의 심의는 독립성을 지녀 좋은 점도 있지만, 공수처의 기소 요구처럼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것이라면, 공수처 1호 사건의 처리 결과이고 기소 요구를 한 만큼, 공소심의 위원회에 대한 성격과 구성, 그리고 피의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호되는 지 등도 한 번쯤 집고 가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p>	<p>주요 이슈를 다루면서 시청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친절한 보도'를 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p>
2021	안호림	K-pop은 해외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BTS의 유

9/19(일)		<p>그 선두에는 방탄소년단, BTS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 발표한 싱글 '버터'는 빌보드 차트에서 함께 10주간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9월 8일 오후 1시 [뉴스특보]에서는 BTS의 버터가 다시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버터'가 리믹스 버전 출시에 힘입어 빌보드 정상을 탈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버터'는 올해 최장기간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에서 1위를 기록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달만에 다시 정상을 차지하면서 통산 10번째 1위를 기록한건데요.. 10주 이상 '핫 100' 차트 1위에 오른 곡은 '버터'를 포함해 역대 40곡뿐이라고 합니다. '버터'는 지난 5월 발매된 뒤 9주간 1위를 한 후, 최근까지 꾸준히 톱 10에 랭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리믹스 버전이 가세한 미국의 인기 여성 래퍼, 메건 더 스탠리언의 힘있는 랩이 노래의 '힙'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이에 힘입어 1위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기사는 김성수 문화평론가의 말을 빌려 BTS가 거둔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BTS의 행보는 국내외 팬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 BTS의 뉴스는 빌보드에서의 놀라운 흥행성과 그래미, 아메리칸 뮤직어워드 등 음악계를 대표하는 각종 시상식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K-pop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해서 단순한 아이돌그룹의 소식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연합뉴스TV의 BTS관련 보도는 대부분 단편적인 사실 보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9월 8일 오후1시 뉴스특보 기사가 그나마 가장 긴 보도였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BTS의 국제적 위상, 음악사적 의미,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각 국에 나가 있는 특파원 등을 활용해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보도가 이뤄지길 바랍니다.</p>	<p>엔 총회, 콜드플레이와의 협업곡 관련 리포트들이 다수 제작되었습니다. 9월20일에는 미국발 리포트 [성승환] BTS, 미래 세대에 "변화에 겁먹기보다 웰컴을" 등을 통해 BTS의 UN 총회 활동을 다루었고 9월24일,10월5일에도 BTS 관련 리포트가 방영됐습니다. 또 뉴스메이커 핫피플 코너를 통해 BTS-콜드플레이를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리포트의 경우 1분30초라는 제한적인 시간 탓에 BTS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는 점을 양해바라며, 12월 연합뉴스TV 10주년 특집 기사를 통해 BTS 관련 K 콘텐츠 기획 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p>
2021 9/26(일)	김창숙	<p>9월 20일 오전 8시 &lt;뉴스특보&gt;에서는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과다 진료 사례의 문제점에 대해 짚었습니다. 앵커는 정부가 최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올리기로 결정해 직장인 등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커져만 가는데, 보</p>	<p>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고, 국민의 혈세 낭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p>

		<p>협금 수급 등 악용 목적으로 의심되는 과다 진료 사례에, 지난해에도 2조 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건강보험료율을 높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되면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높이는 과다 진료의 문제점을 시의 적절하게 잘 짚어준 보도였습니다. 다만, 해당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과 관리감독의 문제점이 없는지 짚어주는 내용이 부족해 아쉬웠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합뉴스TV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가 필요해보입니다.</p>	
--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21. 09. 05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10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가짜뉴스의 폐해를 없애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야당, 언론계, 시민단체, 국제언론단체 일각에서 언론재갈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 오전 10시 <뉴스특보>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짚어왔습니다. 앵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8월 30일 오후에 예정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여야간의 합의가 가능할 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야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하게 가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개정안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재차 논의를 시작하자거나 폐기하자는 것이 야당 측의 안일텐데 합의를 위한 간극이 너무 커서 합의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덧붙여 여당 입장에서는 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인데, 현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면 여론의 못맛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기국회로 가면 여당이 아니라 야당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것은 더 이상 토론할 사람이 없거나 회기가 종료되거나 5분의 3 이상이 종결 동의를 해야 하는데, 회기는 최대 100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5분의 3이면 179명이 돼야 하는데 무기명 투표인데다 여당에서 소신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어 여당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언제 처리할 지가 고민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앵커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협의가 아니라 시기를 늦춰서 협의를 좀 더 해보자에 방점을 둔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전원위원회를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전원위원회는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이라 하더라도 다시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 전원위원회 안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수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여야 협의를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지도부의 입장은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위한 처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일부 조항이 문제라면 협의를 통해 다른 방식의 처리방안이 있는지 끝까지 해보겠다는 것이고, 혹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 회의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결국 처리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강행처리에 대한 반대가 높은 것은 맞지만, 법안 자체를 지지하는 여론은 50 대 30 정도로 높게 나타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와 목적에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고 주장하며, 절차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처리에 대한 의지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부위원장은 여론형성의 전제가 국민들이 법안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문제위가 대안을 낼 때도 대안의 줄거리조차도 알리지 않았다. 안전조정위원회에서 3대 3으로 하는데 김의겸 의원이 야당 몫으로 들어가서 안전위원회를 종결시켜 버렸다”고 비판하며, 언론과 야당을 통해서 법안의 중요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릴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당이 말하는 법안의 내용은 피해구제라고 하지만 그 피해구제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지를 국민들이 아직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 자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뭘 알아야 무엇을 표현을 할지 결정을 할텐데 알권리 자체가 막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이라는 학자들의 비판을 언급하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제가 안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원위원회는 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현재 의석수 그대로 가는 거라 과정을 거치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속의과정을 거치려면 공청회도 다시 하고, 법안에 대한 논의과정도 더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이 상정될지 여부에 대해 추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부위원장은 청와대 입장이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30일에는 여당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8월 30일 <뉴스특보>를 보면서, 국민들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눈에 띄었는데요. 정책 결정에 여론은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개정안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고발, 비판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언론 스스로 자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기회로 언론은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언론의 가치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언론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친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 사퇴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지난 8월 30일 오전 10시 <뉴스특보> 대담에서 다루었습니다. 앵커는 “윤 전 의원의 생각에 맞춰가야 한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이준석 대표의 한 언론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며, 김기원 원내대표 역시 “윤 의원의 사퇴안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며칠 사이 뒤바뀐 국민의힘 투톱의 빠른 처리 압박 배경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기찬 전 부위원장은 대화를 통해서 윤 의원의 진정성을 확인한 것이라며, 수사받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정치적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확고한 본인의 뜻에 맞추어 야당 입장에서 상정에 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의원

입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태가 마음에 안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 부친이 땅을 산 2016년 5월 당시, 농사지을 의사가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는 것에 대한 처벌조항은 있었지만, 2019년 7월 1일 이전에는 형사형법 3년 이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5년으로 만료가 된 사건인데 권익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경찰에 넘길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도, 5년 이상 본인이 농사를 짓거나 위탁한 과정을 거친 후 개인에게 임대차한 것도 불법이 아니라며, 도덕적, 정치적 비난은 차치하더라도 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법령 관련 위반으로 해서 경찰에 통보할 사안인가에 대해 윤 의원이 불만이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입장 변화에 대해 원내 전략의 일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치적 필수라고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는 권익위원회 발표날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가서 눈물로 사퇴를 만류했고, 그 전날 최고위원회 논의에서는 아무 문제없다는 면제부를 당 차원에서 준 바 있는데, 이를만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를 동안에 윤희숙 의원의 해명이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고, 부친의 농지 취득과 관련해서도 투기 목적이 있다는 취지의 언론인터뷰를 해 실제 농사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 윤희숙 의원의 사퇴는 실제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꼬리자르기 정치행태로 보는 게 맞다며,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사퇴처리를 하겠다고 입장 변화를 하려면 처음 사퇴 만류를 했던 배경은 뭔지, 입장 변경의 배경이 뭔지, 윤희숙 의원 본인은 물론 부친의 위법행위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 국민권익위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사퇴처리 빨리 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걸 공을 민주당에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 입장에서는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로 만약 사퇴 처리가 된다면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 본인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쁠 것이 없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의원 부친의 투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퇴문제로 이슈를 전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런 방식으로 윤 의원의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적 시각에서도 매우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5일 윤희숙 의원이 돌연 대선 경선 포기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의원직 사퇴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들이 우세하지만, 정치권에서 윤 의원의 사퇴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자극적인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윤 의원 일가의 부동산 투기와 위법성 여부이고, 의혹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관계도 밝혀지기 전에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자구 정쟁화하려고 하는데, 연합뉴스TV는 사건의 본질이 호도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윤 의원뿐만 아니라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 모두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하여 시청자들의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1. 09. 12 방송) : <바로보는 TV 읍부즈맨 511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전자발찌를 찬 범 죄 전 력 자 들 의 범 행 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수장이 만나 경제정책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으며, 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요구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전자발찌를 차고 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범 죄 전 력 자 들 의 범 행 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고휘훈

기자는 흰색 차량에서 포승줄에 묶인 한 남성이 내려, 경찰에 이끌려 검찰청으로 가는 내용을 전하며, 그 남성이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40대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반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 여성과 직장 동료 사이로 알려진 A씨는 과거 이사 문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A씨는 집에 들어가 여성이 귀가할 때까지 1시간 40분 정도를 기다렸고, 지인과 통화하며 집에 돌아온 피해자는 A씨를 발견하자 비명을 질렀고, 이 소리를 들은 지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10여 년 전에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강윤성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살인을 하고, 발찌를 끊고 추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일 오전 7시 뉴스특보에서는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이 16일 만에 검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장흥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11시 반쯤 장흥군 장흥읍의 한 시장에서 마씨를 붙잡아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로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씨는 지난달 21일 장흥군 장평면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마씨는 과거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5년간 복역한 뒤 2016년 출소했고, 7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7시 뉴스특보에서는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전자발찌를 더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뒤, 나흘 만에 다시 대책을 가지고 나온 것이고, 전자발찌 훼손 시 주거지 압수수색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고 전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사건 이후 보호관찰소를 직접 점검해 고위험대상자 관리시스템 미비, 보호관찰관 특사경제도 숙지 부족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법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만들어 전자발찌 훼손 사건 등이 발생하면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운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특별사법경찰이 신속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경찰과 협조하여 빈틈없는 검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족한 관리·감독 인원을 어떻게 충원할지는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 확보와 국회 협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30일 전자발찌의 강도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뒤 나흘 만에 나왔는데, 법무부가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여론을 의식해 성급한 대책만 내놓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했고, 전주완산구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성폭행 미수가 발생했으며, 마창진은 지난달 21일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 후 도주해 경찰이 검거한 소식이입니다. 특히나 강윤성의 경우 2명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전자발찌가 살인을 방지하는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신속수사팀 가동 등 2번의 대책발표에 대해 기자는 관리감독 인원확보와 예산확보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다만 해마다 어느 정도의 전자발찌 절단 사건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전자발찌 훼손과 추후 범죄로 이어지는 비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전자발찌 착용 시의 범죄율은 얼마인지 비교도 추후에는 짚고 가면 좋을 것입니다. 특히나 국민들은 왜 쉽게 절단되는 재질의 전자발찌를 사용하고 있는 지 그 이유와 더 강한 재질의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없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보도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전자발찌의 재질을 바꾸고 IT강국의 강점을 살려 전자발찌의 전자적 기능을 좀 더 부가한다면 재범의 비율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지난 8월 31일 오후 7시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 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추진하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표 시기는 1~2주 내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음 달 말 끝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의 '3차 연장' 여부는 추석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전했는데, 가상 자산 거래소 규제에 대해서는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며 법에 따른 신고제 시행 일정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5시 뉴스특보에서는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의 최대 잠재 위협요인으로 떠오르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수장이 만나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억제 양면에서 돈줄 죄기가 빠른 속도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했는데, 40분 남짓 이어진 만남에서 주된 관심사는 천정부지로 불어나는 가계부채와 이에 따른 금융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이 총재는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 위험이 계속 누적되면 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거듭 강조했으며, 고 위원장도 동일하게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이 총재는 추가 인상을 시사했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6일 "저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란 기대가 있다면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기준, DSR 관리 강화를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31일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회동에선 두 기관이 알려 다름을 벌이며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논의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는데, 다만, 핀테크 산업 발전에 직결되는 법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여론에, 두 기관 간에 이견이 큰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도입을 제외하고 법 개정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정책 중 통화정책의 큰 변화가 있어서, 이미 한번 금리인상이 있었는데, 위 보도는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함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며, 두 기관장은 1,8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불균형 관리를 위한 긴밀한 정책 공조를 강조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금융 수장들의 만남이 있었고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아직 미국 등 선진국에서조차 이뤄지지 않은 금리인상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뤄지고, 또 추가적으로도 있을 것이란 내용에 궁금할 것이고 조금은 해석보도가 필요해 보인 부분입니다. 특히 서학 개미라고도 표현되듯이 요즘은 시청자들이 세계적인 흐름에 관심이 많은 모습이기도 해서 요즘 많이 회자되는 미국의 테이퍼링 정책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나라 금융정책과도 어느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도 간단한 언급은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 경제 시국이고 이 때문에 경제정책에 대한 두 금융수장의 공조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눈이 많이 쏠려있다는 내용을 마무리 멘트로 넣었음 더 좋을 것입니다. 지난 3일 오후 5시 뉴스특보에서는 공수처가 주최한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공수처는 주최한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교사 특별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으며,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조 교육감이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봤으며, 또 실무자들로 하여금 채용 업무 권한이 없는 A씨 지시를 받아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점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공수처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의 권고와 같은 결론인데요, 최석규 공수처 공소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수사팀 의견, 또 공소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등을 참고하여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 즉각 반발했는데요, "부당한 결론"이라며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교육감 기소 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에 조 교육감 기소를 요구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도 같이 송부했는데요, 이로써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작된 공수처 1호 수사는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데요, 다만, 검찰과 공수처 간 충돌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하고요,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응할 계획이 없다"고 미리 못 박았다고 전했습니다. 당해 보도에서는 공수처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같은 결론으로, 공수처가 검찰에 주최한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 요구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는 공소심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공수처의 기소요구 결정에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기관의 심의는 독립성을 지녀 좋은 점도 있지만, 공수처의 기소 요구처럼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것이라면, 공수처 1호 사건의 처리 결과이고 기소 요구를 한 만큼, 공소심의 위원회에 대한 성격과 구성, 그리고 피의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호되는 지 등도 한번쯤 짚고 가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호립 시청자평가원(21. 09. 19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12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정계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최측근이 지난해 총선 직전 아담이었던 미래통합당에 여권 정치인의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되어 있는데다가 국가기관의 사유화 의심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도 사건에 대해 연일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의혹이 처음 알려진 9월 2일 오후 9시 [뉴스특보]에서 이 사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최측근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제히 윤 후보를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보도가 이른바 '청부 고발' 의혹으로 번지자, 당사자들은 제각각 해명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전달자로 지목된 김 응 의원은 수많은 제보를 받아 당에 전달했지만 실제 고발된 것은 아니니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손 검사는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며, 윤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 보도이자 날조라며, 자신을 향한 음해 공작이라 반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후보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면서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기사는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오후 9시 뉴스특보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의문점을 짚어보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고발장은 누가 작성했는가입니다. 기사는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모두 고발장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한편 김웅의원에 의해 당에 전달된 고발장과 실제 미래통합당이 최대표를 고발한 고발장이 거의 동일해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문은 '손준성 보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김의원은 조작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손준성 검사로부터 직접 고발장을 받아 전달했을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실제 없는 의혹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여권의 주장대로 윤후보가'고발사주'한 것이 맞다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가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손준성 검사의 행동이 윤 후보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충분히 독자적인 행동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사는 핵심 관계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결국 진상은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마무리합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은 요즘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연합뉴스TV도 연일 사실기사 뿐 아니라 해설기사, 분석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을 내보내며 자세히 조망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10시 뉴스특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최민희 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을 대변할 정태권 전 국회의원 두 명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드물게 3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방송되었는데요, 두 전문가가 각종 의혹과 쟁점에 대해, 각자 자신이 대변하는 당의 입장에서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 치우치지 않게, 차분하게 짚어가며 잘 정리했다고 보입니다. 이번 고발사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회적,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대선 국면에서 이번 사안이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팩트체크와 사실에 기반 한 보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의혹과 사건의 흐름과 맥락을 시청자에게 차분히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1년 반을 넘어가면서 국민의 피로감도 더해가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10월 또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조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6일 오후 9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백신 인센티브 적용이 본격화하는데 대해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평가와 급격한 완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전합니다. 기사는 지난 6월말 완료된 거리두기 정책을 7월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고 불과 10여일 만에 급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거리두기 정책이 오히려 다시 강화되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은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가 급격한 완화 신호 해석될 수 있다며 사용을 자제해달라고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의료계에선 위드 코로나가 감염병과 인류 역사에서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박멸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방역완화는 필연적이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해외 사례로 볼 때 충분한 준비 없는 방역완화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8일 오후7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검토 시점을 11월로 다시 제시했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전합니다. 현재 백신 접종 속도로 볼 때 국민 70%가 추석 전 1차 접종을 하고 10월 말 2차 접종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면역형성에 필요한 2주가 지난 11월부터는 고강도 거리두기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월 말이라고 밝힌 것을 한 달 정도 늦춘 것이라고 합니다. 기사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방역당국의 단계적, 점진적 추진 방침을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인명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사회적 수용력 또한 고려해야한다고 전합니다. 가장 먼저 완화조치를 실시한 영국의 경우 연간 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언론에서는 '위드 코로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에서도 여러 차례 관련 기사를 내보내고 있고, 9월 8일과 9일 오전 10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연일 전문가 인터뷰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백신 접종률, 치료제 개발, 일정 수준 이하의 중증환자 비율, 사회적 합의 등의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이에 대해 보도했는데, 다만, 잘 정리된 하나의 기사로 보도하기 보다는 여러 기사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했을 뿐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식과 감수 가능한 인명피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막상 이를 어떤 식으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나아가 영국, 싱가포르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대대적인 방역 완화 조치를 취해서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단계적 완화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 국가 상황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만 보도되었을 뿐, 정확한 현황과 경과에 대해서는 보도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외국 사례 등 다양한 보도들이 나와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는 보도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K-pop은 해외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는 방탄소년단, BTS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 발표한 싱글 '버터'는 빌보드 차트에서 합계 10주간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9월 8일 오후 1시 [뉴스특보]에서는 BTS의 버터가 다시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버터'가 리믹스 버전 출시에 힘입어 빌보드 정상을 탈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버터'는 올해 최장기간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에서 1위를 기록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달만에 다시 정상을 차지하면서 통산 10번째 1위를 기록한건데요.. 10주 이상 '핫 100' 차트 1위에 오른 곡은 '버터'를 포함해 역대 40곡뿐이라고 합니다. '버터'는 지난 5월 발매된 뒤 9주간 1위를 한 후, 최근까지 꾸준히 톱 10에 랭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리믹스 버전에 가세한 미국의 인기 여성 래퍼, 메건 더 스탠리언의 힘입은 랩이 노래의 '힙'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이에 힘입어 1위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기사는 김성수 문화평론가의 말을 빌려 BTS가 거둔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BTS의 행보는 국내외 팬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 BTS의 뉴스는 빌보드에서의 놀라운 흥행성과 그래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등 음악계를 대표하는 각종 시상식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K-pop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해서 단순한 아이돌그룹의 소식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연합뉴스TV의 BTS관련보도는 대부분 단편적인 사실보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9월 8일 오후1시 뉴스특보 기사가 그나마 가장 긴 보도였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BTS의 국제적 위상, 음악사적 의미,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각 국에 나가 있는 특파원 등을 활용해 입체적이고 심층

적인 보도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21. 09. 26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13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한 주도 대선 경선 후보들에 대한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측의 역공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이번 사안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안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이 덮이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후보 캠프에서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는데, 9월 20일 오전 8시 <뉴스특보>에서 관련 소식을 다뤘습니다. 기사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막대한 공공 이익을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권력형 비리, 재판 거래 등으로 얼룩진 비리 백화점이자 전대미문의 부패 사건"이라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홍준표 후보는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했고, 최재형 후보는 '국민이 상상하지 못할 단군 이래 최대 특혜사업'이라고 비판하는 등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도 일제히 강한 어조로 이 후보를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반격에 나서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른바 돈 냄새를 맡은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들이 얽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주민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은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 부패 세력과 토건 세력이 이재명 후보에게 일격을 당하며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빼앗겼다가 금융기관의 외피를 쓰고 다시 나타난 '국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특히 이번 사안이 부각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이 덮이고 있는 것에 분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사는 이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경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9월 19일 오후 6시 <뉴스특보>에서는 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변인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최근에는 주가조작 의혹 관련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자금 제공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매수한 뒤 되팔아 차익을 남겼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대가성 협찬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이 상당 부분 진행돼 추석 연휴 이후 김 씨를 소환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윤우진 전 울산세무서장 관련 수사는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라며, 윤 전 서장은 윤 전 총장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으로,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부동산 개발 인허가 관련 로비 자금을 받아 전·현직 검사와 고위 공무원 등에게 로비했다는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검찰은 윤우진 전 서장의 과거 뇌물수수 사건 '수사 무마' 의혹도 수사 중으로, 대통령 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조만간 윤 전 서장 등을 불러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을 전했습니다. 대권주자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각종 의혹 제기와 이에 대한 역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얼마두고 있지 않은 시점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도 파악 안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각종 의혹들만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선거보도에서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강조되다 보니 언론이 양비론적인 입장만 견지하여 사건을 해석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상관조정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언론이 정치적 중립성은 견지하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취재보도하고,

팩트체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논란으로 기존 논란이 무마되지 않도록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에 대한 보도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 19일 <뉴스03>에서는 그동안 우월한 지위를 누리며 성장해 온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방식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카카오가 3천억 원 기금 조성 등의 상상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냉랭하다고 전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이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소설 저작권 갑질 파문까지 터져 나오면서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규제는 필수적이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행위를 막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 등의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존 산업과의 공존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언급하며, 신산업으로의 진출을 허용하되 기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20일 오전 8시 <뉴스특보>에서 앵커는 예전에 없던 산업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 생태계의 급격한 붕괴를 막는 게 순조로운 신산업 도입의 관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는 현재 도수가 있는 안경은 전문 안경사가 있는 안경점에서만 만들어 팔 수 있지만, 시력 보정용 안경도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나라가 등장하고 국내에서도 이를 추진하는 곳이 생기자 정부가 이해관계자 간 타협점을 찾겠다고 나섰지만, 생계 위협을 이유로 반발하는 안경사들과의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기존 업계와 공존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짚으며,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성인 인증을 한 사람이면 주류를 자판기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간에 일부 편의점에서 시범 도입 중이지만, 상용화 되면 편의점은 물론, 동네 나들가게에서도 심야시간에 무인 시스템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어 인건비나 점주의 노동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전했습니다. 기사는 4차 산업혁명이 기존 산업 생태계를 훼손할 여지가 있으면 저항에 부딪히지만,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수단이 될 때는 환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예전에 없던 새로운 사업분야들이 생겨나면서 신규사업간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다양한 생태계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에 없던 합리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는데요.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언급한 보도들처럼 연합뉴스TV가 다양한 국내외 성공사례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장 주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의 내용들이 적절한지, 현실성은 있는지, 여러 주체들의 요구들에 부합한 것인지 등을 평가하고 토론하는 장도 마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9월 20일 오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과다 진료 사례의 문제점에 대해 짚었습니다. 앵커는 정부가 최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올리기로 결정해 직장인 등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커져만 가는데, 보험금 수급 등 악용 목적으로 의심되는 과다 진료 사례에, 지난해에도 2조 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사는 서울역에서 직장인들에게 한 해 병원 이용 횟수를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시민들은 대부분 5회 이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사는 응답자 대부분이 20, 30대였기 때문에 복지부가 발표한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 17.2회와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과다 진료의 평균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계에선 통상 연 150회 이상 외래 진료 사례를 과다 진료로 분류하는데, 지난해 기준 18만여 명이 과다진료를 받아 1조 8,000여억 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투입되었고, 한 해 500차례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은 538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다 사례인 20대 남성은 지난해 180만원의 보험료를 냈는데, 연 3,071차례 외래 진료를 받아 건보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낸 보험료의

20배를 훌쩍 넘는 3,800만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는 연 2,450여건의 진료를 받은 20대 남성으로 납입보험료 대비 공단 부담금은 무려 314배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과다 진료 사례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000명을 웃돈 상황이라며,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것은 아닌지 관리·감독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건강보험료율을 높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되면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높이는 과다 진료의 문제점을 시의적절하게 잘 짚어준 보도였습니다. 다만, 해당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과 관리감독의 문제점이 없는지 짚어주는 내용이 부족해 아쉬웠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합뉴스TV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가 필요해보입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p>	<p>일시/장면설명</p>
<p>2021년 9월 05일 04시/ 김창숙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2021년 9월 12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p>	<p>일시/장면설명</p>
<p>2021년 9월 19일 04시 / 안호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2021년 9월 26일 04시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